

2009. 5. 27 (수) 15:00 이후 사용바랍니다



보도자료

▶ 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과장 박성희
서기관 이원두

▶ 기재부 인력정책과 과장 이상원
사무관 김정국

TEL : 2110-7254(노동부) / 2150-2814(기재부)
E-MAIL : 212mk@molab.go.kr
F A X : 504-2039

▶ 2009.5.27(수) 배포
▶ 총 쪽 (사진없음)

< 본 자료는 <http://www.molab.go.kr>(알림마당<e-노동뉴스>)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. >

“직업능력개발체제를 시장친화적으로 전면 개편” - 근로자, 기업·산업계, 지역의 훈련수요 폭넓게 반영 -

□ 노동부와 관계부처는

○ 5.27(수) 대통령 주재로 민간·정부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『국가 경쟁력강화위원회』 제13차 회의를 개최하고, 직업능력개발체제를 시장친화적으로 전면 개편하기로 하였다.

□ 이와 같이 직업능력개발체제를 시장친화적으로 전면 개편하게 된 배경은

- 그간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재정투자가 꾸준히 증가하여 산업 인력 양성, 실업자의 재취업 및 재직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하였으나
 - * '02년 7,655억원 → '09년 17,805억원
- 훈련기관, 정부 등 공급자 중심의 운영체제로 개인, 기업 및 지역과 산업계의 수요를 반영하는데 한계를 보여 왔고
- '09년도 중앙정부·지자체에서 1.8조원 규모(사업수 111개)의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체계적인 관리가 부재하여 지원대상이 중복되는 등 재정투자의 비효율이 우려된다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이다.

□ 이에 노동부 등은 직업능력개발체제를 다음과 같이 개편하기로 하였다.

- 첫째, 기업과 산업계의 훈련수요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.
 - 그간 직업훈련 등 인적자원개발에 제한적으로 참여하여 온 산업별 협의체(SC)에 대해 그 역할을 확대하고 산업계 내의 대표성을 강화 하며, 국가기술자격 출제기준 결정·변경 권한을 부여하는 등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
 - 전국에 8개소가 있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인력개발원이 지역 중소기업의 훈련 거점기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하였다.
- 둘째, 기업, 특히 중소기업의 훈련수요를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유연하고 다양한 현장학습(Workplace Learning)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다.
 - 그간 중소기업의 직업능력개발 활성화를 위해 훈련비 지원율을 인상하는 등 제도개선을 하였으나, 대·중소기업간 참여율 격차를 해소 하는데는 역부족이었다.
 - 이에 중소기업 현장중심 능력개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
 - 이를 지원할 수 있는 현장중심 능력개발전문가를 매년 100명씩 육성하여 더 많은 중소기업이 생산성향상에 도움이 되는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.
 - * 중소기업 학습효과 : 산재사고 감소(0.34 → 0.2건), 불량률(2.06 → 0.95%)

1인당 기업 자체 훈련투자(26 → 58만원)

○ 셋째, 기업의 훈련비용 지원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기업의 불편을 대폭 개선하기로 하였다.

- 기업이 방문하여 제출하는 각종 증빙서류를 On-Line으로 제출토록 하여 “무방문 행정서비스”를 시행하고
- 훈련비용 지원절차를 4단계 → 3단계로 축소하여 훈련비용 지급 처리기간을 30일 → 10일로 단축하며
- 사업주가 맡았던 훈련비 지원신청 업무를 훈련기관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하여 훈련비용 처리업무 전담인력이 없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대폭 덜어주고
- 『훈련비용 법인카드 결제시스템』을 도입하여 사업주가 훈련비를 카드 결제 후 카드대금 납부일 이전에 훈련비용 지원으로 사업주의 훈련비 우선 부담을 덜어주기로 하였다.

○ 넷째, 범정부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앞으로 종합적인 정보제공 및 체계적인 평가를 통해 관리하기로 하였다.

- 노동부의 직업훈련정보망(HRD-net)을 『직업능력개발 통합 정보 관리시스템』으로 개편하여 전부처의 직업훈련 내용을 수록하고
- 이를 통해 수요자에게 훈련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, 훈련생의 훈련 이력 관리를 통해 중복 수혜 등을 방지하기로 하였다.
- 또한, 『직업능력개발사업평가센터』를 지정하여 훈련기관의 역량과 실시 결과 등을 평가하고, 그 내용을 직업훈련정보망에 게시하여 수요자들이 직업훈련과정을 잘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
- 이를 전 부처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확대하고, 평가함으로써 그 결과를 예산 심의시에도 반영해 나가기로 하였다.

- 아울러, 정부 부처간 유사사업은 국무총리실에 『직업능력개발사업 조정 협의체』를 두어 평가를 거쳐 필요시 통폐합하고, 각 부처 내 유사사업은 자율적으로 통폐합키로 하였다

- 노동부: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향상지원,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등 ⇒중소기업 훈련지원」으로 통합
- 문화부: 공예경영아카데미 운영, 공예디자인, 마케팅전문인력양성 ⇒ 공예전문 아카데미로 통합
- 방송위: 방송영상전문교육지원, 디지털방송기술전문인력양성 ⇒ 방송인력 재교육 사업으로 통합

○ 다섯째, 지난해부터 시범사업을 실시중인 직업능력개발계좌제는 중·장기적으로 훈련참여자의 선택권이 필요한 모든 정부 부처 직업능력개발사업까지 확대하기로 하였다.

- 직업능력개발계좌제는 직업훈련을 받고자 하는 실업자에게 200만원 한도의 훈련비를 지원하고 구직자가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을 스스로 선택, 필요한 시기에 훈련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수요자 중심 능력개발의 핵심 제도로써
- 금년 3. 16일부터 노동부 실업자 훈련을 대상으로 전국단위에서 실시되고 있는 시범사업에 대해 “훈련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로 훈련과정의 선택 폭이 넓어지고, 훈련생의 만족도가 상승하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”으로 평가하였다.
- 이에 정부는 동 제도를 시범사업 후 2011년까지 실업자·비정규직 등을 대상으로 본격 시행하고, 이후 시범사업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전 부처의 직업능력개발 사업중 개인의 훈련선택권이 요구되는 사업은 계좌제로 확대하여 나가기로 하였다.

- 이러한 「시장친화적 직업능력개발체제」로의 개편을 통해
 - 정부는 훈련생의 취업소요기간이 평균 1.4개월 단축되고, 소득증대로 인한 생산유발 효과도 기대되는 등 2013년까지 국민소득 1.1조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.
 - 또한 계량화가 곤란한 재직자 향상훈련 개선효과까지 포함하면 국민 경제에 추가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.
 - 대통령을 비롯한 회의 참석자들은,
 -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고, 경제위기를 선진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기회로 활용키 위해 직업능력개발의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
 - 앞으로 훈련수요자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고 원하는 직업능력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.
- * 붙임 : 시장친화적 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방안 요약 1부.

【 시장친화적 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방안(요약) 】

“정부주도에서 수요자 중심의 직업훈련체제로의 전환”

- 직업훈련계좌제 전면 확대 및 훈련 상담 강화로 훈련참여자의 선택권 강화
- 훈련과정에 대한 규제완화로 훈련시장의 경쟁촉진
- 현장훈련 활성화 등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대폭 강화
- 직업능력개발 통합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등 전 부처 사업의 체계적 관리
- 기업의 훈련참여 유도를 위해 훈련비용 지원절차 대폭 간소화

1. 추진배경

- '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후 평생직업능력개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으로 직업능력개발 투자는 지속 확대되어 왔으나
 - * '02년 7,655억원 → '09년 17,805억원
- 현행 직업능력개발체제는 질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미흡
- 이는 비효율적인 정부주도의 공급자 중심 운영에 주로 기인

- ◆ 공급자 중심의 현행 직업능력개발체제를 시장친화적*으로 획기적으로 개편
 - * 훈련시장에서 기업·근로자·산업계의 수요에 따라 직업훈련의 양과 질이 시장에서 결정되는 체제
- 노동시장 유연화를 지원하고 고숙련 인적자본의 축적으로 노동생산성 향상 및 이를 통한 지속적인 경제성장 견인

2. 현황 및 문제점

□ 현황

- (훈련대상별) '09년에는 취업준비자(37천명), 재직근로자(420만명), 실업자(173천명) 훈련실시 예정
- (중앙정부·지자체별) '09년 중앙정부,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사업은 총 111개, 1.8조원 규모

□ 문제점

- (운영시스템) 훈련기관, 정부 등 공급자 중심의 운영 ⇨ 정부의 일방적 물량배정 방식 운영, 산업별·지역별 수요 반영 미흡, 훈련상담 미비
- (훈련시장) 신규 진입의 어려움 등으로 경쟁 촉진 미흡 ⇨ 행정규제로 대학 등 신규기관 참여 미흡*, 훈련직종도 단순서비스·사무관리 분야로 편중(43%)
 - * 실업자훈련 참여 현황('08년) : 지정 훈련기관(노동부) 73%, 기술계 학원 20%, 평생교육시설 1.8%, 대학 0.5% 등
- (훈련내용) 집체훈련 위주의 지원으로 중소기업 참여 저조 ⇨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학습요구 반영 미흡*
 - * 중소기업은 생산 차질이 발생하지 않는 현장훈련을 선호하나, 현장훈련에 대한 엄격한 요건과 낮은 지원
 - * 훈련비 지원 현황 : 집체훈련 65.1%, 원격훈련 34.5%, 현장훈련 0.4%
- (관리체계)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체계적 관리 미흡 ⇨ 부처별·지자체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미흡, 훈련성과에 대한 평가와 정보제공 미흡

3. 정책 과제

□ 훈련참여자의 선택권 강화

- 수요자의 주도적인 선택과 책임을 강화하는 “직업능력개발 계좌제 전면 확대”
 - 시범사업 후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하고
 - 중장기적으로 전 부처 사업 중에서 개인의 훈련 선택권이 요구되는 사업에 대해 계좌제로 전환
- 훈련시장의 경쟁 촉진
 - 훈련과정에 대한 규제*를 완화하고 훈련비 지원방식을 유연화 하여 대학 등의 참여를 촉진
 - * 훈련인원(학급당 정원 60명 이내), 훈련시간(2일 16시간 이상) 등
 - 훈련기관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체계를 정비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정보 공개 강화
- 수요자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하고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훈련 상담 강화
- 직업능력개발 지식포털 사이트』를 구축하여 다양한 형식의 직업교육 훈련 콘텐츠(text, e-Learning, 동영상, e-Book, 애니메이션 등)를 축적·유통

□ 산업계와 지역의 참여 확대

- 산업별 협의체(Sector Council)의 인적자원개발 역할 강화
 - SC를 IT·디자인 등 신성장산업 분야로 확대하여 역할을 확대하고, 산업계 내 대표성 강화
 - 산업별로 특화된 훈련 실시('08년 93억원 → '09년 136억원), SC에 출제기준 결정·변경 권한을 부여하는 등 인적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 강화

- 지역별 수요에 부응하는 직업능력개발 활성화
 - 지역 거점 공공훈련기관인 폴리텍대학(38개 캠퍼스)은 신성장동력 산업 인력양성 역할 강화('13년까지 총 65개 학과 개편)
 - 정부위탁 우선직종훈련(78개 직종, 101개 훈련기관 참여)을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 직종으로 전환('09년 10% → '12년 15%)
 - * 엔지니어링 서비스업, 디자인 기획 등
 - 정부가 지정한 훈련기관인 "대한상의 인력개발원"을 지역 중소기업 훈련수요에 부응하는 기관으로 전환

□ 현장중심 능력개발 촉진

- 사업장에서 직접 실시하는 현장훈련 활성화
 - 현장훈련의 요건을 완화*하고, 현장훈련에 대한 고용보험 환급기준을 상향** 조정
 - * 1일 8시간이상 집체훈련 후 현장훈련 실시 → 집체훈련 없이 현장훈련 가능
 - ** 훈련비 지원단가의 40% → 50%
- 현장중심 능력개발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육성
 - 기능명장, 품질명장 등을 사업장의 현장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"전문 컨설턴트"로 양성('10년부터 매년 100명)
 - 사내 고속연자를 현장 전문가로 육성하여 사업장 혁신 선도
- 중소기업의 직장내 학습지원 강화
 - 우리나라 중소기업에서 성공할 수 있는 "학습조직화" 모델을 구축하여 정착 <'08년 280개소 → '12년 1000개소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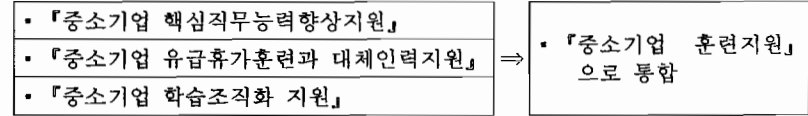
□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체계적 관리

- 직업능력개발 통합 정보관리시스템 구축
 - 노동부 직업훈련 정보망(HRD-net)을 정부의 직업능력개발사업 포털(Portal)로 개편하여 각 부처와 공동이용 추진
 - 모든 사업 시행기관은 훈련 상세정보를 게시하여 상호 비교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요자의 훈련선택 편의 제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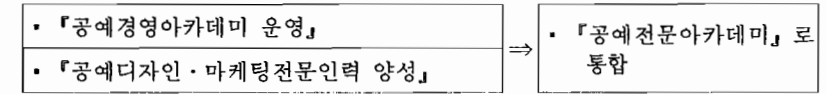
○ 유사사업 통폐합 추진

- 각 부처 내 유사사업은 금년 하반기부터 자율적으로 통폐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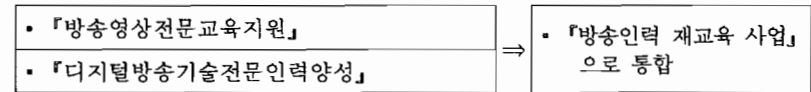
< 노동부 사업 >



< 문화부 사업 >



< 방통위 사업 >



- 각 부처간 유사사업은 평가 후 평가결과에 근거하여 통폐합
- 관계부처로 구성된 『직업능력개발사업 조정 협의체』 운영 ('09.6월, 국무총리실 주관)



- 전문인력 양성이 아닌 일반적인 실직자·근로자 직업훈련 차원의 유사 중복가능성이 높은 직능사업(여성부, 중기청, 교과부 등)에 대해서 우선 평가하고, 이를 심의하여 통폐합 추진

○ 훈련비용 지원 절차 간소화

- 훈련비용 지원 관련 각종 증빙서류 On-Line으로 제출
- 훈련비용 지급 처리기간을 현행 30일에서 10일로 단축

- 훈련비용 처리업무 전담인력이 없는 중소기업의 애로를 덜어주기 위해 「**훈련기관의 훈련비 지원신청 대행제도**」 도입
- 기업이 경제적 부담없이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「**훈련비용 법인카드 결제시스템**」 도입

4. 기대효과

- “시장친화적 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”은 우수한 산업인력 양성, 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 직접적인 사회·경제적 효과는 물론
- 궁극적으로 **고숙련 인적자본의 축적**으로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

<계량 효과 분석(추정, 한국직업능력개발원)>

- ◆ **기대효과 : '13년까지 국민소득 1.1조원 증가**
(1인당 국민소득 25달러 증가)
 - * 취업소요기간 단축(4.4개월 → 3.0개월) 효과 : 2,727억원(직능원,08년)
 - * 취업률 제고(63%→73%) 목표 달성 효과 : 2,165억원(직능원,08년)
 - * 소득 증대로 인한 생산유발효과 : 6,311억원(한국은행,07년)
 - * 임금근로자 평균임금 자료 참고('07년)
- ◆ 계량화가 곤란한 재직자 향상훈련 개선효과까지 포함시 추가적인 소득증대 등 국민경제 기여효과 예상
 - * 훈련참여기업 비중 1% 증가 시 1인당 국민소득 298달러 증가 예상
 - '08년 한국노동경제학회 자료 참고<ppp 기준(구매력으로 환산)>